

2009년 제3차 다문화사회 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구성 전략과 과제

일시 2009. 8. 28(금) 16: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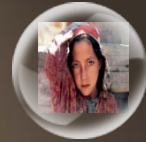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 형 수(행정학 박사)



생각열기





♣ 우리나라 성씨(姓氏) ♣

◆ 1985년 통계청 조사 당시 275개

- ✓ 외래 성씨 136개 포함
- ✓ 중국계(90% 이상), 일본계, 베트남계, 일본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등

◆ 2000년 통계청 조사 당시 728개(3배 증가)

- ✓ 기존 성씨 286개, 귀화 성씨 442개(기존 성씨의 1.5배)
- ✓ 가족부 등록과정에서 개명 않고 원래 이름 등록 이유

(이상 조선일보 2009년 8월 22일자)

- ✓ 남한 내 인구 중 1천만 명 상회 추정



I. 서론

1.1. 다문화로의 이행

법무부 출입국 관리 현황 자료

◆ 체류외국인 수 136만 명 정도(2008년 12월 현재)

- ✓ 내국인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34%
- ✓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 장기체류자(895,464명), 단기체류자(26만 3천 402명), 불법체류자(20만 489명) 포함

◆ 결혼이민자 수 12만 6천 155명(2009년 6월 현재)

- ✓ 여성 배우자가 93.8%를 차지
- ✓ 2007년 3월 이후 도입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외국국적 동포 31% 증가, 결혼이민자도 10.6% 증가
- ✓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42,356건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 감소하여 현재 3만 6천 204건
- ✓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자의 9건 중 1건, 농촌결혼자의 4건 중 1건



I. 서론

1.2. 문제 인식

[1]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다문화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 ✓ 대도시의 특정지역 중심 주거밀집, 문화적 차이 및 지역공동체와의 부조화
- ✓ 긍정적 기능 : 기피업종 노동인력 대체
- ✓ 부정적 기능 : 형법상 범죄피의자 증가

• 2008년 외국인 피의자는 20,623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증가

• 죄종별 : 지능범(불법 입·출국 관련 문서 위·변조, 보이스피싱 등)이 36.2% 차지

• 국적별 : 중국(65.2%) > 몽골 > 태국인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2008)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 ✓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 비율 77.8%
- ✓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문화적 적응과 가족 기능 문제
- ✓ 긍정적 기능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사회성원 재생산
- ✓ 부정적 기능 :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문제, 자녀 교육과 사회화 문제

• 2008년 총 이혼건수는 116,535건 외국인 부부와의 이혼은 총이혼 대비 9.7%(전년 대비 29.8% 증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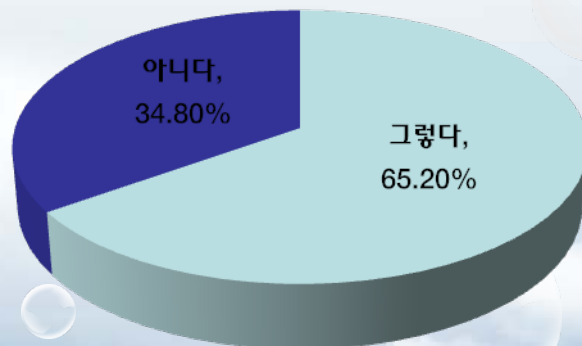
1.2. 문제 인식

[2] 한국사회의 특수성

◆ 다문화주의에 대한 폐쇄성

- ✓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과 경험이 다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 ✓ 정치적 의미의 민족국가(nation state) 형성 실패 : 남북분단
- ✓ 분단 극복 논의 아래 ‘민족공동체’ 또는 ‘단일 민족주의’ 강조
- ✓ 상대적으로 동일 공간 내의 역사적·문화적 공동체 유지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가?



귀화인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처: SBS 특집 “단일민족의 나라”(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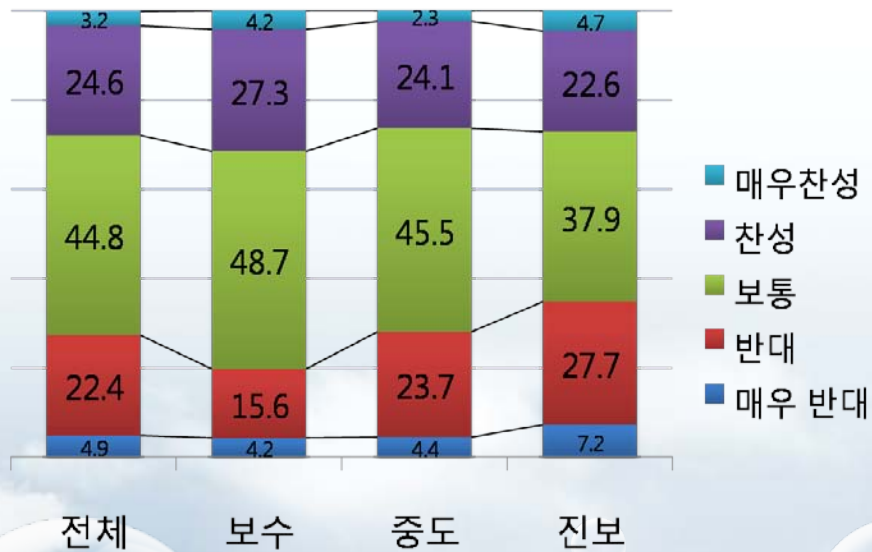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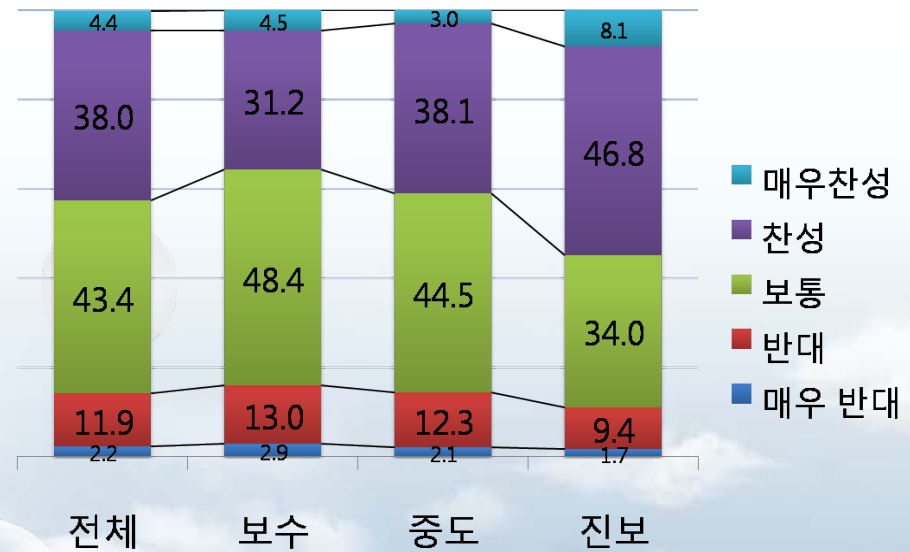
1.2. 문제 인식

대외개방성에 관한 조

한국은 단일민족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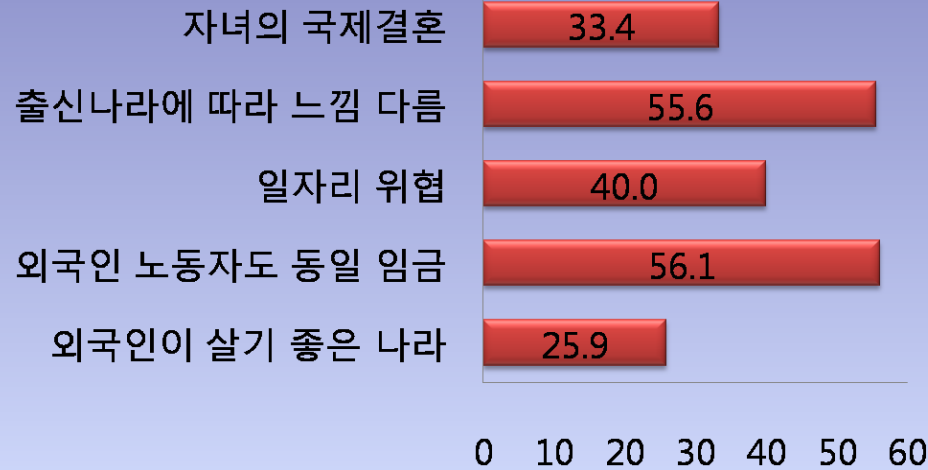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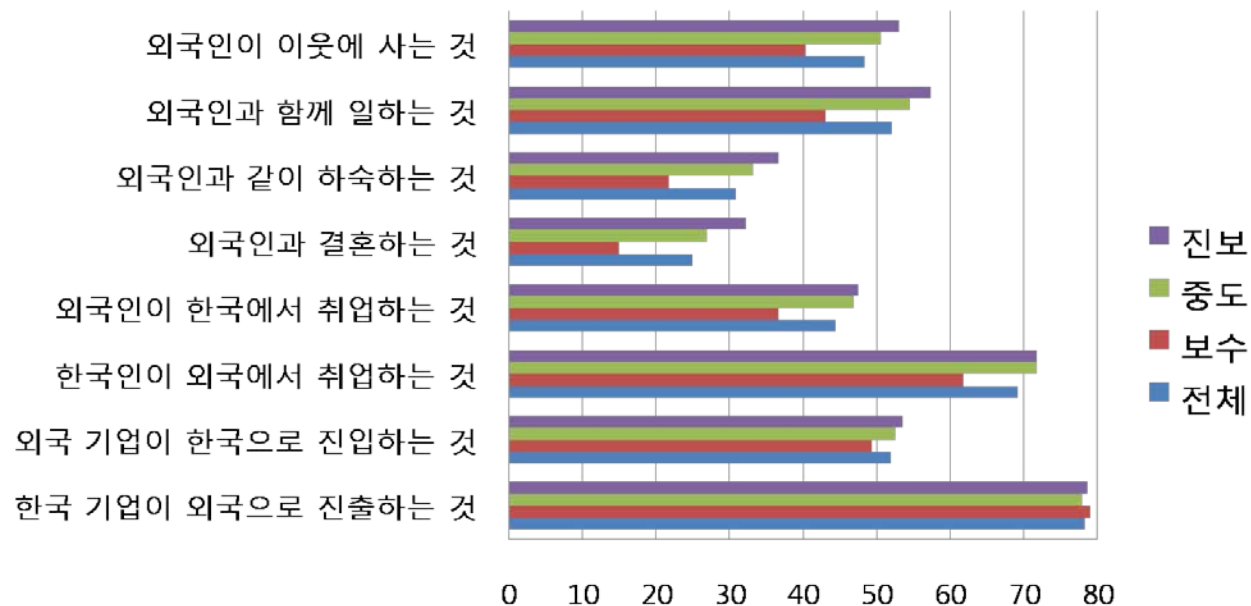


출처: 한준SBS 특집 “단일민족의 나라”(2006)

외국인에 대한 태도



외국인에 대한 개방의 정도





1.3. 연구의 관점

- ◆ **다문화정책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적응한다는 것**
 - ✓ 다문화정책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능동적으로 이행해가자는 것이 아님
 -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변화에 '적응'을 강조하는 것
- ◆ **다문화정책의 본질**
 - ✓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민들을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 ✓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성원으로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 단, 우리 사회의 특수성의 강조가 보편성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다문화정책의 유용성**
 - ✓ 다문화적 다양성과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어우러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힘
 - ✓ 다문화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전지구화시대의 적응성 강화에 초점
- ◆ **다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필요**
 - ✓ 정책공동체의 형성과 그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 관리 필요



II. 이론적 논의

2.1. 민족국가,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 민족국가

- ✓ 다문화국가는 민족국가의 재개념화를 전제로 논의
- ✓ 민족 : 객관적 사실(지역, 언어, 역사 등)+주관적 의(민족의식, 민족감정)
- ✓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현실적인 정치원리로 자각→민족국가로 전환
- ✓ 오늘날 다문화사회와 세계시민문화의 형성 등과 같은 이슈로 저항

◆ 다문화주의

- ✓ 의미 :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의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과 관용을 지칭하는 태도(1957년 스위스, 1960후반 캐나다 등에서 사용)
- ✓ 초기 미국 동화주의에 대한 저항과 196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 표방
- ✓ 스티바(J. Sterba) :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이상(ideal)이며,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존중의 이상과 같은 것으로 설명

◆ 다문화정책

- ✓ 킴릭카(Kimlicka, 2002) :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로부터 ‘국민만들기의 응답으로서 다문화주의’로 전개
- ✓ 본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적응 속에 상호존중과 관용의 개방적 태도의 견지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시민 사회 정립을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정의(김형수, 2008:131)



2.2. 다문화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1) 다문화정책 의 특

◆ 던(W. Dunn)의 분류 : 다문화정책은 '산만한 구조의 문제'

- ✓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은 인지된 사회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 ✓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새롭고 창의적인 판단이 필요

(2) 다문화정책 의 목

호 주

- ① 시민적 의무
- ② 문화적 존중
- ③ 사회적 평등
- ④ 모두를 위한 이익

캐나다

- ① 문화의 원조
- ② 문화적 장애 타파
- ③ 인종 간의 상호 교류
- ④ 공용어습득 장려

다문화정책의 단계별 전략

문화적 차별극복단계

- 다문화인정
- 다문화교육정책
- 교육기회 균등
- 평생교육 보장 등

사회적 차별극복단계

- 지위의 차별 금지
- 종교적 차별 금지
- 인종간의 결혼
- 고용기회 균등
- 적정임금보장 등

경제적 차별극복단계

- 경제활동 기회
- 직업선택의 자유
- 기업활동의 자유
- 경제단체 설립
- 정부지원 기회 등

정치적 차별극복단계

- 선거권,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인정
- 정당활동의 자유
- 시민권의 보장

1 단계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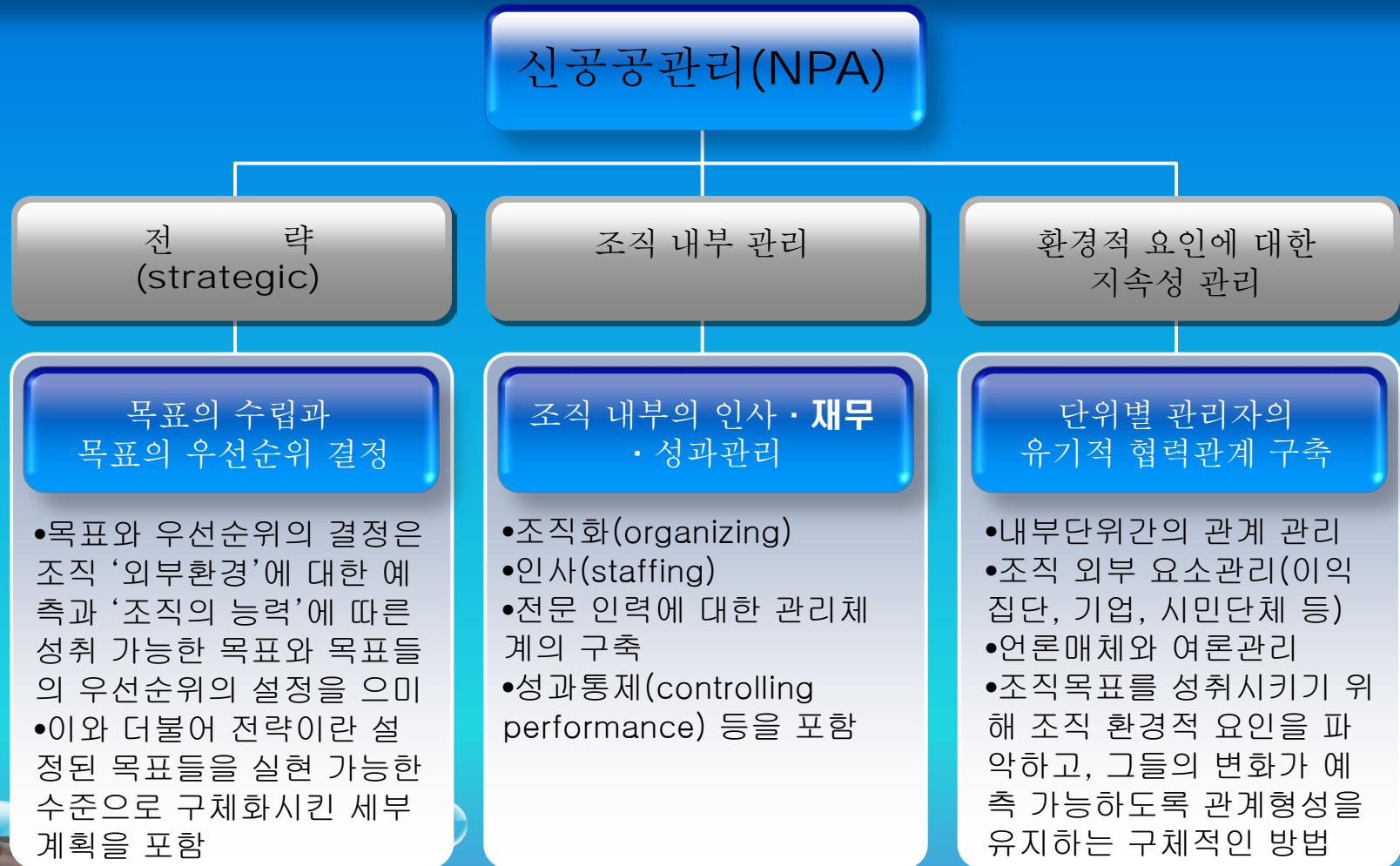
2 단계
(SA)

3 단계
(EA)

4 단계
(PA)



2.3. NPA & *Strategic Management*



Source : Graham Allison,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Are They Fundamentally Alike in All Unimportant Respect?" in Frederick S. Lane eds., *Current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 17.

전략적 공공관리의 4원칙

1

장기간을 고려하는 것

2

일관된 목표와 목적의 통합

3

전략적 관리와 기획이 자연 생성되지 않는다는 인식

4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환경 변화 유도

✓ 전략적 공공관리에서 전략적 사고는 정치적 활동까지 고려함



Source : Barry Bozeman and Jeffrey D. Straussman, *Public Management Strategies* (Jossey-Bass, 1990) pp. 29-30.

2.4. 네트워크이론과 정책공동체

❖ 케틀(D. Kettl, 2000)의 정책공동체¹⁾

-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조직들 간의 상호 연계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해야 한다” ¹⁾고 주장
- 사회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은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 되어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 대해 논의
-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과거의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정책 결정 및 집행 업무수행의 주체를 정부의 관료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의 정책 관련 집단을 포함한 정책공동체가 능률적으로 공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특징

1) D. F. Kettl,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Millennium: The State of the Field,”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10, No.1.(2000), p.24.



2.4. 네트워크이론과 정책공동체

❖ 정책공동체의 장점

- 정책공동체의 장점 : 특정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책공동체가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기능하게 된다면 정책 목표의 달성은 전통적인 관료제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보다는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
- 정책공동체는 해당 정책 이슈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준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정책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책공동체와 조화
- 다문화정책 공동체는 이러한 논의의 아래 제안된 개념
- 다문화정책의 목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해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할 때, '계층제적 거버넌스' 와 같은 전통적인 거버넌스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음
- 현대 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 는 역시 다문화 정책의 관계구조가 수평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 따라서 다문화정책 공동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로 구성



2. 4. 네트워크이론과 정책공동체

❖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 거버넌스라는 개념 사용의 매력은 그 개념의 포괄성
- 과거와 같이 정부(government)라는 한정된 장소(locus)를 벗어나, 다양한 조직들과 비정부단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사회를 통제해 가는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일이며, 사회적 통제를 수직적인 권위에서 찾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horizontal relations)에서 모색함으로서 공공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
-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란 특정분야와 관련된 정책 관련 집단들에게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consultation)하고, 합의(consensus)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연계하여(networking)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네트워크는 개념²⁾을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결점(nodes)과 결점을 잇는 선으로 형성되는 구조로 간주하고 네트워크를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계층적 체제(system) 내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둘 이상의 조직 단위들의 집합으로 제도적 매개(institutional glue)를 통해 얹혀있는 관계를 포괄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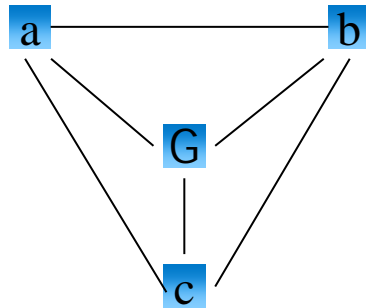
2) Laurence J. O'Toole Jr.,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AR*, Vol. 57, No. 1,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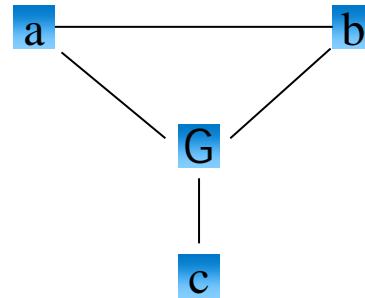
(1) 도우딩 (K. Dowding) 의 네트워크 유형

- 도우딩은 정책공동체구성을 통한 정책연구는 정책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정책공동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들의 객체들이 그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정보, 장소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띤다고 주장³⁾
- 정책공동체의 결집력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객체의 수, ② 상호교류의 빈도, ③ 지속성, ④ 합의, ⑤ 네트워크 내의 자원분배방법, ⑥ 네트워크 내의 권력분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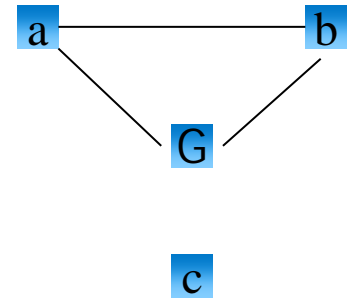
(A형)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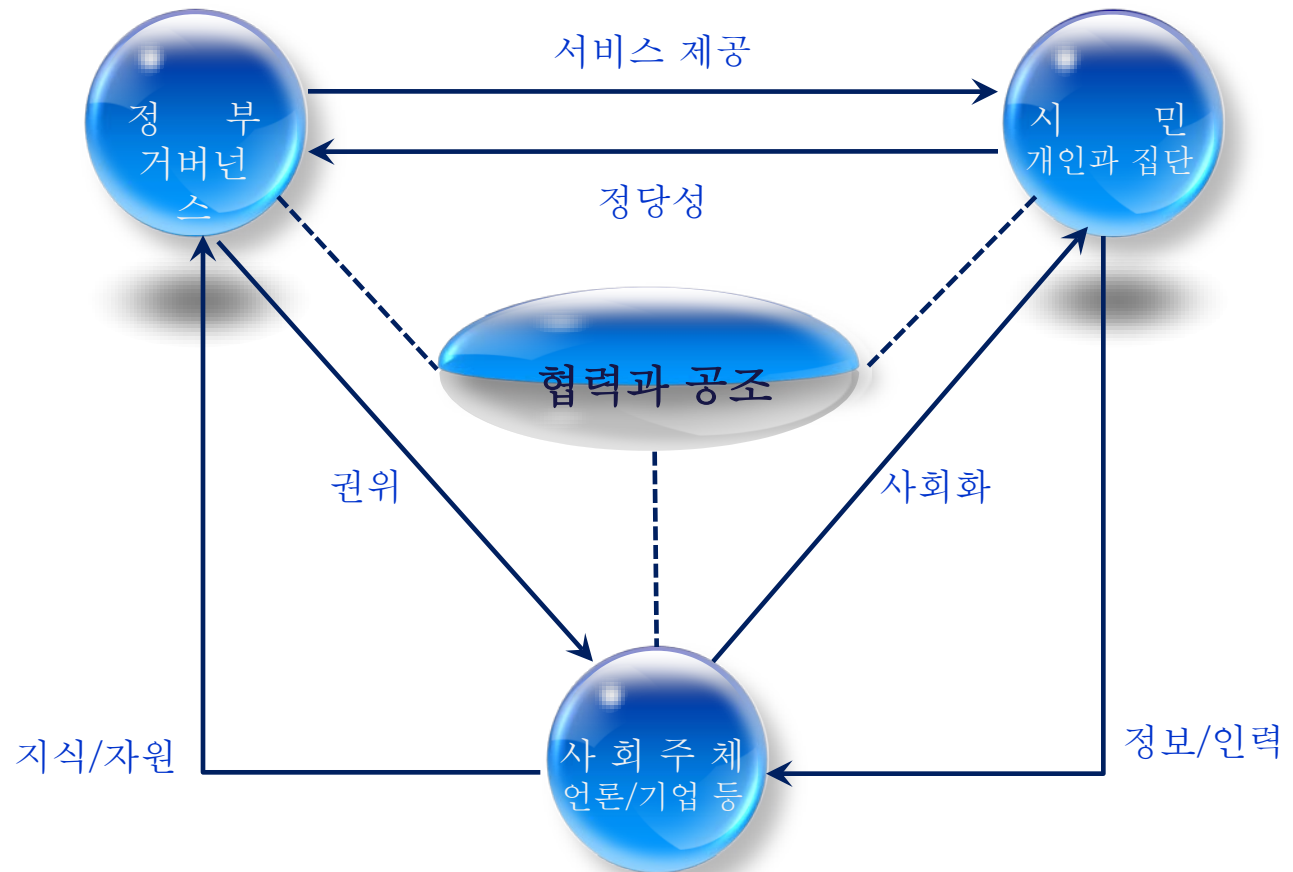
(C형)



- ◆ 다문화 정책의 단계는 1단계(CA)는 다문화 정책의 시원단계로 도우딩의 B형이 적합, 2단계(SA)에서는 A형으로 전환된 연계협력이 가장 바람직하다
- ◆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바람직한 네트워크 형태는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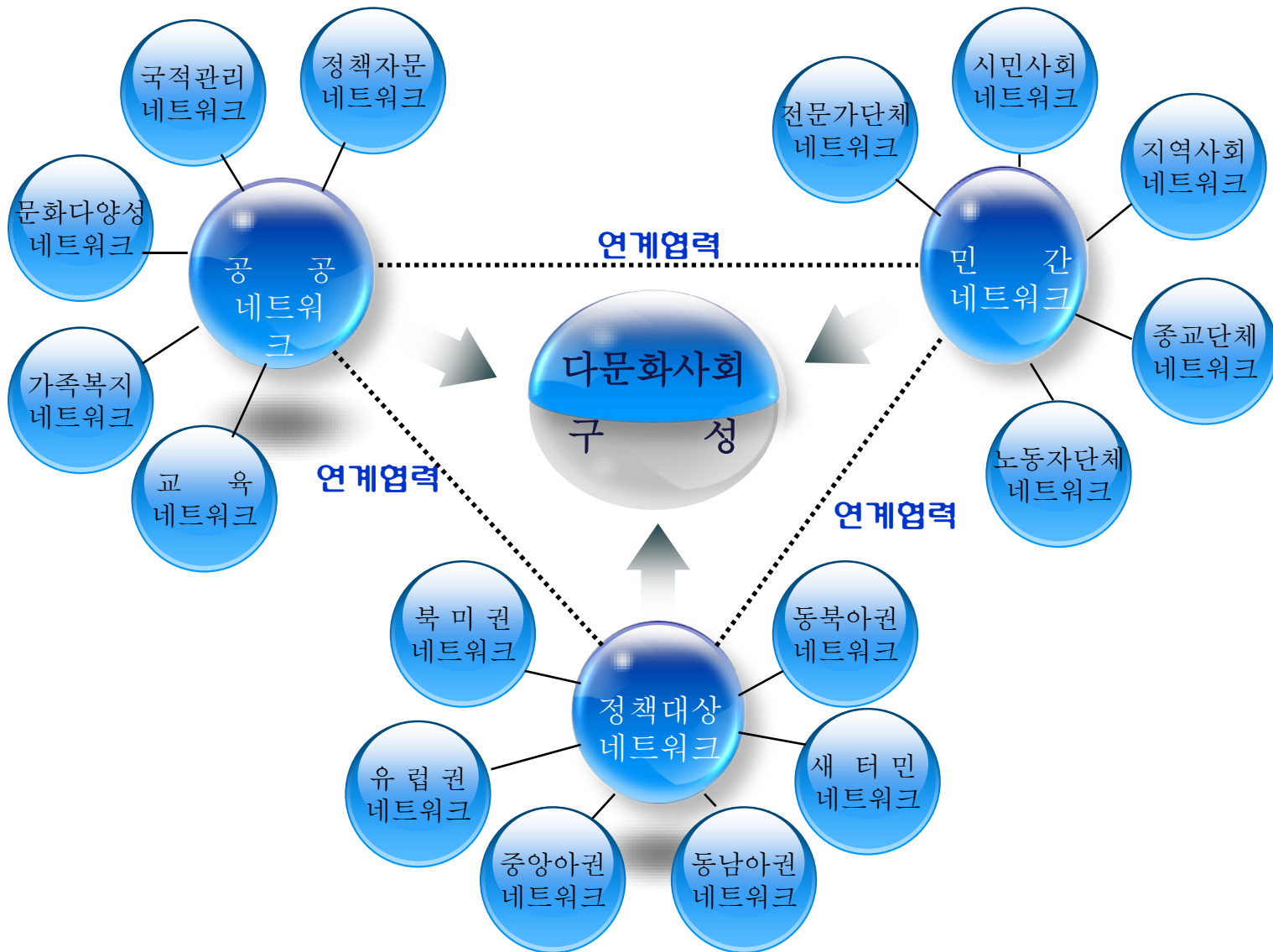
3) Keith Dowding, "Model or Metaphor? : A critical Review of Policy Network," *Political Studies* Vol.43, 1995, pp.136-158.

[2] 사회주체 공조 거버넌스 : 차세대 거버넌스



Source : Evan Vigida, "From Responsiveness to collaboration : Governance, Citizen, and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Public Governance, 2002), p.143.

2.5. 다문화 정책공동체 모형



다문화정책공동체 모형의 구성전략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객체의 수가 많아야 한다.

-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협력 단위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 형태로 구성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객체의 수가 클수록 실질적인 정책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상호교류의 빈도이다

-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협력의 성패는 상호교류의 빈도와 질에 의해 결정
- ✓중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객체가 상호 연계되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야 함

◆셋째, 다문화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내의 권력분배

- ✓ 계층적 구조보다 네트워크 구조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이유는 수직적 상의하달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한 문제를 동반자로 해결하기 때문
-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도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다.

III.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1.1. 다문화정책 현황

정책초기

◆ 중앙정부

- ✓ 2006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대책을 필두로 중앙정부 차원의 최초의 다문화 대책 마련
- ✓ 이후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 체계 마련하기로 하고 주관부처 결정
- ✓ 법무부 : 전반적인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
- ✓ 여성부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족정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되 여성결혼이민자 업무관련 부처·기관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상호 호혜적 역할 분담 추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지정 및 지원
- ✓ 2006년 출발 당시 51개소를 시작으로 집중 거주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부처별 기능 및 협조체계

역할과 기능	담당부처	
	주관	협조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 정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구축	여성부	법무부, 문화부, 보가부, 정통부, 농림부, 행안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보가부	법무부, 여성부, 지자체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법무부	여성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부	여성부, 보가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노동부	여성부
•불법행위 단속	경찰청	법무부
•업무관계자 교육	행안부	전 부처, 지자체

주요정책

◆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정책

- 국가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내부적으로는 보가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여성부 등의 연계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안정적 체류지원 및 보호 강화

- 법무부, 여성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위한 6개 언어 지원 외국인 전용 『1366』 센터와 외국인 전용쉼터 운영

◆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정책

- 여성부, 문화부, 법무부, 행안부

◆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전 부처
- 문화적 편견해소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농촌복지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주요정책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정책

- 교육부, 보가부
- 교과서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발굴 수정
-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이를 반영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정책

- 보가부, 노동부, 여성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모부자복지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의 적용을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 저소득층에게 출산도우미 파견,



III.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3.2.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사회복지 대상 인식의 문제점

- 시혜적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함
- 이러한 정책적 시각은 내국인들에게 다문화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오히려 장벽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큼

◆ 정책집행 주체의 불분명

- 다문화 정책의 특성상 단일부서 관할의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정책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공동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
- 모호한 정책집행 방식은 책임소재 문제
- 정책평가의 대상을 판단할 수 없음
- 집행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



III.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3.2.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 부족

- 다문화 정책의 특성상 단일부서 관할의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정책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공동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
-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 전략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정책 문제임
- 다문화정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정책추진 주체나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의문

◆ 정책집행 주체의 불분명

- 다문화 정책의 특성상 단일부서 관할의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정책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공동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
- 모호한 정책집행 방식은 책임소재 문제
- 정책평가의 대상을 판단할 수 없음
- 집행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



III.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3.2.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다문화인구의 특성 반영 미흡

- 다문화정책의 내용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주민들을 단지 동화(同化)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집행되었던 선진국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정책실패를 경험
- 다문화정책의 목표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융합 재생산 하여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새터민에 대한 정책이 다문화 정책에서 제외

-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새터민 관련 정책을 수립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다문화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사회적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 필요



Ⅳ. 결론 : 정책과제

4.1. 다문화정책 평가지표 개발

- ◆ 다문화 정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복합적인 양상을 띤 **산만한 구조의 정책문제**이다. 따라서 적정성과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할 수 있다.
- ◆ 이와 같은 다문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당국은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차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를 제안한다.
- ◆ 이를 위해서 현행 각종 차별금지 법안 등에 **다문화에 의한 소수자 차별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Ⅳ. 결론 : 정책과제

4.2. 다문화정책공동체 수립

- ◆ 다문화정책은 특정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정책공동체의 수립을 제안한다.**
- ◆ 1단계 수준인 현 상태에서는 각 부처별로 전략적 특성화된 정책을 수립하되 보가부와 여성부를 통해 정책의 수립과 조정기능을 갖고 2단계의 진입시기부터는 다문화정책 공동체를 구축하여 **중앙정부간, 민간기관-정부간, 정책대상-정부-민간기관 간의 연결망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 ◆ 다문화 정책 대상이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IV. 결론 : 정책과제

4.3. 이산(Diaspora)의 관점에서 통합 연결망 구축

-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자칫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비자발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거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소수자가 되어버린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 따라서 다문화정책이 **국민통합 목적에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대안**이 필요하다.
- ◆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등에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국내에 체류 중인 새터민 그리고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산재한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산(Diaspora)’의 관점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배려가 수반될 것을 제안한다.**

